

대법원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2024. 11. 21. 일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이와 달리 종래 법리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음(대법원 2024. 11. 21. 선고 2021다255853 전원합의체 판결)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발생하는 망인의 일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보아야 함(= ‘상속 후 공제’ 방식)
- 이와 달리 “일일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 ‘공제 후 상속’ 방식)”는 취지로 판단한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함

1. 사안의 개요

- 대학교수인 망인¹⁾은 2016. 9. 30. 교통사고로 사망함
- 원고 1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2, 3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공제사업자임

1) 199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한 사람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임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원고 1에 대해서만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상속 후 공제' 방식에 따른 주장)

2. 소송의 경과²⁾

- 제1심 ➡ 원고들 일부 승
 -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인 원고 1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됨(= '상속 후 공제' 방식)
- 원심 ➡ 원고들 일부 승[쟁점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2, 3 패]
 -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먼저 공제하면 그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는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없음(= '공제 후 상속' 방식)
- 원고들 상고

3. 상고심의 주요 쟁점: 전원합의 쟁점

-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하 편의상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하여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의 변경 여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는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을 공동상속인과는 달리 정하고 있어 공동상속인 중 유족연금을

2) 원고 1은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음 ☞ '상속 후 공제' 방식을 따르든, '공제 후 상속' 방식을 따르든 원고 1에 대해서는 수급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남은 손해가 없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 후 공제' 방식과 '공제 후 상속' 방식 중 어떤 견해를 채택하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계산이 달라지게 됨(공무원연금법도 마찬가지임)

4. 대법원의 판단: 전원일치 의견

가. 법리의 선언 ➡ '상속 후 공제' 방식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그 후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직무상유족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되어야 함(= '상속 후 공제' 방식)

- 직무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까지 상속하게 된다면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연금과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은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공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부합함
- 그러나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지급받더라도 같은 목적의 급부를 이중으로 지급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할 것은 아님
- 수급권자가 아닌 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직무상유족연금 수급권은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무상유족연금의 지급으로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이를 공제한다면 손해배상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박탈당하게 됨
- '공제 후 상속' 방식과 같이 손실전보의 중복성을 강조하여 일실 퇴직

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의 공제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면,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는 재원으로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수급권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됨

나. 판례의 변경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등과 해석을 달리 하기 어렵고, 대법원은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준용대상 규정의 해석·적용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이 법질서의 정합성에도 부합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가 공동상속된다는 취지의 ‘공제 후 상속’ 방식으로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 ‘상속 후 공제’ 방식)와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함

다. 이 사건의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 파기·환송

- 원심으로서의 망인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면 나머지가 없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된다고 본 다음 그중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그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였어야 함
- 원심의 판단에는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 등의 공제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환송 후 원심은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기 전에 그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심리하면서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 등을 잘 살펴 직무상유족연금 공제의 대상과 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라.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 망인의 과실비율을 20%로 산정하여 가해차량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음

5. 판결의 의의

- 종전 판례(=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르면, 직무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않는 상속인들의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도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게 되어 실제로 직무상유족연금으로 손해회복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채권을 전부 또는 일부 침해하는 결과가 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가해자를 면책시키는 결과에 이를 수 있었음
- 대법원은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피해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수급권자가 상속분을 초과하여 직무상유족연금 일부를 중첩하여 받더라도 이는 생활보장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사회보장법률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음
- 나아가 대법원은 이 사건 적용 법률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근본적·최종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를 밝힘으로써 법질서의 정합성을 도모하였음